



글로벌 구조 전환 속 양성평등 국제협력 기반 구축과 향후 과제*

초록

- ▶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전 세계적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 ▶ 연구는 3개년에 걸쳐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평등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년차인 2025년에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 성평등 협력 의제 및 전략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 국제규범과 정책 기준 설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OECD와의 협력을 통해 인구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평등 의제가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나아가, APEC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 정부의 여성경제회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분석적 근거를 제공하고, 주요 다자외교 무대인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성평등 정책 성과와 제도적 경험을 공유·확산하여 국제적 정책 담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였음.
- ▶ 향후에는 1차년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OECD와의 성평등 분야 협력 전략을 심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6년에 개최되는 제2차 OECD 고위급 성평등포럼 참석 및 OECD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주요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고 한-OECD 협력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3차년도에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OECD와 성평등 분야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존 협력 실적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실제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이 이슈페이퍼는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윤지소·김은경·박윤정·김유민·김수진(2025)『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양성평등 국제협력 전략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 국제사회는 성평등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기후위기, 디지털화로 전환기를 맞이하며 성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될 위험에 처함.
 -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자원への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성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적 변화는 고용 및 참여 확대를 통해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임금, 기술 습득 기회, 대표성과 같은 영역에서 기존 성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OECD, 2024).
 - 한편, 한국은 중견 공여국이자 여성 인권 규범 선도국으로서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전세계적 공조에 동참하고,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여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윤지소 외, 2024).
- ▶ 본 연구는 세계적 구조 전환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의 성평등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이를 위해, 국제규범과 정책 기준을 설정하는 핵심 플랫폼인 OECD와의 협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위기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한국의 정책 성과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정책 경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음.
 - 나아가,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APEC 여성경제회의 설립 배경, 구조, 동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도 APEC 여성경제회의 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음.
 - 한편, 급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의 성평등 증진을 주제로 APEC 여성경제회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통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정책 성과를 기타 회원국들에 적극적으로 확산하였음.

연구 목표 및 내용

목표: 양성평등 국제 논의 주도 및 위상 제고

1.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양성평등 의제 협력전략 수립

인구구조 변화 속 여성의 노동과 성평등 정책 대응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한국과 OECD가 직면한 공통의 구조적 과제를 진단하고 성평등한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OECD 공공거버넌스국과 공동연구 추진
→ OECD 정책 보고서 발간(OECD, 2025)

2. 양성평등 의제 관련 한국의 국제규범 대응 지원

2025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APEC 여성경제회의 발전 전략 수립
→ 2025년 APEC 여성경제회의 3대 의제 관련 현안 분석 및 국제협력 전략 도출

3. 양성평등 의제 관련 한국의 정책성과 확산 및 국제논의 주도

급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저출산·고령화 환경에서 APEC이 회원 경제의 성평등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급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의 성평등 증진을 주제로 APEC 여성경제회의 부대행사 개최

2 내용 및 성과

(1)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양성평등 의제 협력전략 수립*

▶ 연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진단하고,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이를 통해 국제 성평등 의제 설정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과 가시성을 제고하고, 국내 핵심 현안 해결에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 아이디어를 도출함. 연구는 OECD 공공거버넌스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주제·범위·방법론을 조율하여 기획하였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사례를 정리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함.
- 양 기관은 반복적인 상호 피드백을 통해 정책 권고의 실효성과 비교가능성을 강화하였고, 그 성과를 OECD 정책 보고서 「Women, work and the population puzzle: Gender-sensitive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로 발간하여 한-OECD 성평등 협력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OECD 정책 보고서 주요 분석 결과

- 최근 인구학적 변화는 기존의 성불평등과 맞물려 경제 성장, 사회보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평등과 포용과 같은 사회적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여성은 APEC 및 OECD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OECD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성장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960년 3.3명에서 2022년 1.59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이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64세 인구 비율은 1992년 20.4명에서 2022년 31.3명으로 상승하였으며, 2052년에는 53.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OECD 전체의 1인당 GDP 성장률이 연평균 1.0%(2006~2019년)에서 0.6%(2024~2060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성별 노동시장 격차와 결합되며 증폭된다고 분석함. OECD 평균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 81%, 여성 71%로 약 10%p 격차가 존재하며, 멕시코(31%p), 한국(16%p) 등 일부 국가는 격차가 더욱 큼. 반면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남성을 상회하며, 평균적으로 약 9%p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교육 성과가 노동 투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줌.
- 또한, 경제활동 참여율 및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한다면, 경제 성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을 수치로 뒷받침함. OECD 추정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및 근로시간 격차를 2060년까지 해소할 경우 OECD 평균 연간 성장률이 0.23%p 상승할 수 있음. 국가별로는 멕시코 0.52%p, 일본·칠레·호주 0.25%p, 한국 0.24%p의 성장 효과가 추정됨.
- 한편, 성별 격차의 핵심 요인으로 무급 돌봄노동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함. OECD 평균 50세 이상 인구의 약 7%가 매일 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62% 이상이 여성임. 성별에 따른 무급돌봄 양상은 여성의 전반적 돌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이들의 시간 사용, 유연성, 경제활동 참여 등에 제약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유급 근로와 무급 근로 모두 성불평등이 심화됨.
-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보고서는 성평등을 인구정책의 주변 요소가 아닌 핵심 변수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성별 격차가 누적된 결과, OECD 평균에서 65세 이상 여성의 연금소득은 남성보다 26%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노후 빈곤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짐. 보고서는 양질의 돌봄, 성별영향 분석, 범정부 조정이 결여될 경우 인구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함. 반대로 성인지 관점을 인구전략 전반에 통합할 경우, 경제 성장, 생산성, 및 생활 수준 향상이 기대됨.

* 본 자료는 OECD(2025) 자료를 바탕으로 번역 및 일부 편집(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원저작물: OECD. (2025). Women, work and the population puzzle: Gender-sensitive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8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e2e6aae-en>, 접근일: 2025.12.11.).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본 각색/번역본에 표현된 의견과 주장은 OECD 또는 OECD 회원국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서는 안됨. 또한 원문과 번역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원문이 우선함.

▶ OECD 정책 보고서 시사점

- **정부 주도 대응 강화:** 정부는 입법·규제·재정 권한과 더불어 주요 고용·조달 주체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인구구조적 도전과제를 성평등 목표에 연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정책수단의 활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됨. 정부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고 여성의 완전한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 및 동원할 수 있음. 인구구조적 전환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무급 돌봄의 성별 격차 등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법적 제도와 프로그램의 도입이 특히 중요함.
- **법정부 전략 및 성인지 데이터 통합:** 성평등과 인구 활성화 목표를 연계한 충분한 자원의 법정부 전략을 마련하고, 명확한 일정·예산 및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질의 성인지 데이터와 분석을 국가 인구계획에 통합하여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정책 조율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도구 활용:** 성인지 예산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인구구조적 변화 속에서 고용 분야의 성별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예산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여, 모든 이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GIA)는 인구 관련 개혁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수 있는 서로 다른 영향을 고려하고 법정부적 정책 목표를 의도치 않게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음.
- **거버넌스 및 공공부문 리더십 강화:** 명확한 거버넌스와 부처 간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함.

(2) 양성평등 의제 관련 한국의 국제규범 대응 지원

▶ 연구는 2025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 정부의 APEC 여성경제회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분석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둠.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온 APEC 여성경제회의의 구조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APEC여성경제회의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경제 동향 분석 결과

- APEC은 2025년 현재 21개의 회원경제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임. 매년 21개 APEC 회원경제 중 하나가 APEC 회의를 주최하는데, 정상회의 이외에도 통상, 재무, 중소기업 등 주요 분야별 장관회의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여성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APEC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경제회의(Women and the Economy Forum, WEF)가 개최되고 있음. APEC 여성경제회의는 최근 10년 간 여성 경제 권한 강화 및 포용적 성장 기반, 디지털 경제 및 글로벌 무역과 여성의 역할 강화, 디지털 경제 및 글로벌 무역과 여성의 역할 강화, 팬데믹 회복과 여성의 역할, STEM 및 ICT 분야 여성의 역할 강화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며 다양한 여성 의제 확산을 도모하였음.
- APEC 지역 내 여성의 금융 접근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신용 차별금지 제도는 미흡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팬데믹 이후 완전한 회복 없이 장기적 하락세를 보임.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별 진입제한, 무급돌봄노동 불균형, 무역·시장 접근성 제약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마찬가지로, 여성의 교육·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술·직업교육 참여 감소, 보건 취약 요인 지속, 디지털 폭력 규제 미비 등으로 여전히 구조적 격차가 존재함. 나아가, 리더십·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정체되어 구조적 장벽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며, STEM 참여·연구개발 인력 등 혁신 분야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와 데이터 불완전성이 지속되어, 환경·인프라 격차 역시 개선이 필요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성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격차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경제 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하는 APEC 여성경제회의 의제 고도화 작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연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음. 윤지소·이택면·김은경·김효정·김유만·임소연. (2025). APEC 여성경제회의 고도화 연구. 성평등가족부.

▶ 2025년 APEC 여성경제회의 의제 및 발전 전략

- 이러한 동향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근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강조되어야 하는 여성경제 의제는 △디지털·AI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확대 촉진, △기술을 매개로 하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대응 강화, △인구 변동에 따른 돌봄체계 재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성인지 AI 기술:** AI는 여성의 고용·경제활동·사회참여에 중대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알고리즘·서비스 전반에서 성별 편향이 재생산될 위험이 큼. STEM·AI 분야의 여성 대표성 부족, 데이터 노동의 여성 집중, 자동화로 인한 직무 대체 등 성별 격차가 AI 확산과 함께 심화되고 있음. APEC은 성인지 AI 가이드라인, 젠더 데이터 표준, 여성·소수자 디지털 역량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AI 생태계 구축을 촉진해야 함.
- **기술 매개 젠더폭력:** 기술 발전은 기존의 성폭력을 온라인 기반으로 확장·가속화시키며 이미지 기반 성폭력, 딥페이크, 디지털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음. 혐오표현 증가, 친밀관계 폭력의 디지털화, 플랫폼 책임 미흡, 이주여성·청소년 등 취약집단의 피해 심화가 주요 현안으로 나타남. 기술매개 젠더폭력 대응은 예방 중심 접근, 피해자 통합지원, 플랫폼 규제, 디지털 시민성 교육, 그리고 초국적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추진해야 함.
- **인구변동과 돌봄:** 초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서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무급·저임금 여성 중심 돌봄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돌봄 서비스 공급 부족, 가족 기반 돌봄의 약화, 돌봄노동자의 취약한 처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약이 주요 현안임. ILO 5R 기반 돌봄경제 구축, 역내 데이터·정책 협력, 돌봄 인프라 확대, 이주 돌봄노동자 보호, APEC 공동의제화를 통해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함.

〈표 1〉 2025 APEC 여성경제회의 의제: 현안 및 협력 방안

	디지털·AI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확대 촉진	기술을 매개로 하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대응 강화	인구 변동에 따른 돌봄체계 재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배경	• AI는 여성의 고용·경제활동에 다층적 영향을 미치며, 알고리즘·데이터·서비스 전반에 존재하는 성별 편향이 불평등을 재생산할 위험 존재 • UNESCO·GSMA 등 국제기구·민간은 AI 성평등 대응과 디지털 포용을 핵심 의제로 추진 • APEC 차원의 성인지 AI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증대	• 온라인·AI·SNS·IoT·플랫폼 기반 환경에서 기존 성폭력이 확장·가속화되어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제약하는 국제적 정책 의제로 부상 • 폭력은 무한 복제·확산 가능하며, 피해의 일상화·비가시화가 심각 • n번방·딥페이크 성착취 등 사례로 TFGBV의 초국가성·구조적 위험성 확인	•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아태지역 3대 메가트렌드로 부상 • 무급·저임금 여성 돌봄노동 중심의 기존 체계는 지속불가능 • 성평등 기반의 돌봄경제 구축은 인구위기 대응 핵심 전략
현안	• 여성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자동화·AI 대체 위험 증가 • STEM·디지털 핵심인재·AI R&D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 부족 • AI 데이터·알고리즘 편향(안면인식 오류, 채용편향 등) 지속 • 플랫폼 노동·데이터 노동에 여성 집중, 저임금·저숙련 구조화 • AI 서비스의 여성화(여성 음성·이미지)로 고정관념 강화	• 이미지 기반 성폭력·딥페이크·유포불안·온라인 스토킹 등 피해 급증 • 혐오표현·여성혐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젠더갈등 구조화 • 이주여성·여성노인·저소득층·아동·청소년 등 취약집단 피해 심화 • 친밀관계 폭력(IPV)·디지털 통제에 대한 법·제도 공백 존재 • 성매매·성착취·인신매매의 디지털화·은폐 심화 • 플랫폼 기업의 신고·삭제·책임 체계 미흡	• 출산율 급감, 고령인구 급증, 생산연령인구 축소로 부양 부담 확대 • 아동·고령·성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vs 공적 서비스 공급 미흡 • 돌봄 노동자 처우·전문성·노동환경의 구조적 취약 • 가족 기반 돌봄 약화(1인가구 증가·동거가족 감소) •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노동시장 진입·유지 어려움

	디지털·AI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확대 촉진	기술을 매개로 하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대응 강화	인구 변동에 따른 돌봄체계 재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APEC 협력 방안	• APEC 공동 성인지 AI 정책 프레임워크 및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 • 성별 분리 데이터·대표성 기준 마련 및 공정성 검증제 도입 • 여성·소수자 대상 AI·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 플랫폼·AI 시스템의 성별 영향 평가 공동 연구 • 정부-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 기술 거버넌스 구축	• 예방 중심 TFGBV 대응체계 구축(모니터링·조기감지·통계 구축) •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삭제·상담·치유·법률·주거 등) • 온라인 여성혐오·디지털 폭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화 • 플랫폼 기업의 책임·의무 강화(신고·삭제·적극적 차단) • 국경 간 TFGBV 수사·사법 공조 및 글로벌 규범 정비 • 디지털 시민성·성인지 교육 체계화(특히 청소년·취약계층 대상)	• ILO 5R 기반 성평등 돌봄경제 구축(인정-감소-재분배-보상-대표) • 아태지역 국가 간 돌봄 데이터·정책 비교연구 및 공통 지표 개발 • 돌봄 인프라 확대, 노동시장·사회보장·휴가제도 통합 개혁 • 이주 돌봄노동자 보호 위한 송출-유치국 협력 체계 강화 • APEC·G20 등에서 돌봄경제를 핵심 의제로 공동 제안

출처: 윤지소 외(2025) 내 성인지 AI 기술 의제 배경문서(pp.15~31), 기술 매개 젠더폭력 의제 배경문서(pp.32~46), 성인지 인구변동과 돌봄 의제 배경문서(pp.46~68) 내용을 표로 정리함.

(3) 양성평등 의제 관련 한국의 정책성과 확산 및 국제논의 주도*

▶ 연구는 성평등 의제 관련 한국의 정책성과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논의를 주도하며, 역내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APEC 여성경제회의의 부대행사를 개최함.

- 부대행사는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속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핵심 주제로 설정하고, 보육·돌봄, 유연근무, 부모휴가 등 한국의 정책 경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회원경제 간 정책 학습과 공동 인식을 확산함.
- 나아가 각국의 모범사례와 정책 교훈을 종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성평등 실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의제와 지원 방향을 제시하여 한국의 국제적 정책 리더십과 역내 기여를 강화함.

▶ 논의 결과 및 시사점

-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평등한 접근 필수적
- 인구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접근 방식 채택
 -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지속과 청년 여성 고용률 증가는 청년 세대의 성평등 기대가 높아진 결과로, 기존의 생계부양자-전업돌봄자 모델이 아닌 돌보는 노동자, 일하는 돌봄자 개념을 반영한 정책 필요
 - 인구, 경제, 사회보장 정책이 상충될 경우 정책의 전반적 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성평등 관점의 채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 구성원의 변화한 가족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책 재설계 필요
- 돌봄에 대한 가치 제고
 - 인구구조 변화는 돌봄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귀결
 - 공공성을 명분으로 하는 돌봄노동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 무급 돌봄노동의 불평등한 부담이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맞돌봄이 가능한 법·제도 설계 필요
- 구체적 정책수단 확대와 제도 정합성 제고
 - 육아휴직 제도의 커버리지 확대 및 활용률 제고, 수당 및 시간 정책의 양적 확대
 - 성평등한 가족친화적 사회규범, 양질의 고용 제공, 경직적 노동구조 개선, 유연한 근무환경 마련

* 부대행사 프로그램 및 세부 논의 내용은 다음의 원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윤지소. (2025) APEC 여성경제회의(Women and the Economy Forum, WEF):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젠더리뷰 2025 가을호 pp.36~44.

3 향후 과제

- ▶ 본 연구는 3개년 과제 중 1차 연도에 해당되는 과제로,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OECD와의 협력을 통해 인구변화적 관점에서 여성의 고용과 성평등 정책 대응 전략을 체계화하였음. 둘째, APEC 여성경제회의의 제도적 배경과 운영 동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여성경제회의 의제 설정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음. 셋째, 인구구조 변화와 성평등을 주제로 APEC 여성경제회의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정책 성과를 회원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음.
- ▶ 2025년도에 실시한 사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차기 년도 과제를 제안함.
 - 2차년도인 2026년에 개최되는 제2차 OECD 고위급 성평등포럼(Forum on Gender Equality)에 참석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형 성평등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 한국뿐 아니라 해외의 성평등 정책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논의하여 효과적인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확산 전략은 국내 성평등 정책의 성과 경험을 토대로 OECD와 같은 다자 플랫폼을 통로로 활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이러한 국제적 확산은 일방적 전파가 아닌 국내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상호순환적 구조로 추진되어야 함.
 - 이어서 3차년도인 2027년에는 한-OECD 협력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OECD와 성평등 분야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국제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한 성과 확산 실적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며, 그 결과를 향후 협력 전략 및 사업 운영에 환류하도록 함.

-
- 참고자료** 윤지소·이미정·장윤선·정성미·조혜승·김유민·송지선. (2024). 북경행동강령 채택 30주년 이행평가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지소. (2025) APEC 여성경제회의(Women and the Economy Forum, WEF):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젠더리뷰, 78, 36-44.
- 윤지소·이택면·김은경·김효정·김유민·임소연. (2025). APEC 여성경제회의의 고도화 연구. 성평등가족부.
- OECD. (2024). Harnessing the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 for gender equality: Insights from the 2024 OECD Forum on Gender Equality.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61.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harnessing-the-green-and-digital-transitions-for-gender-equality_860d0901-en.html).
- OECD. (2025). Women, work and the population puzzle: Gender-sensitive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8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e2e6aae-en>).
-

주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관계부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